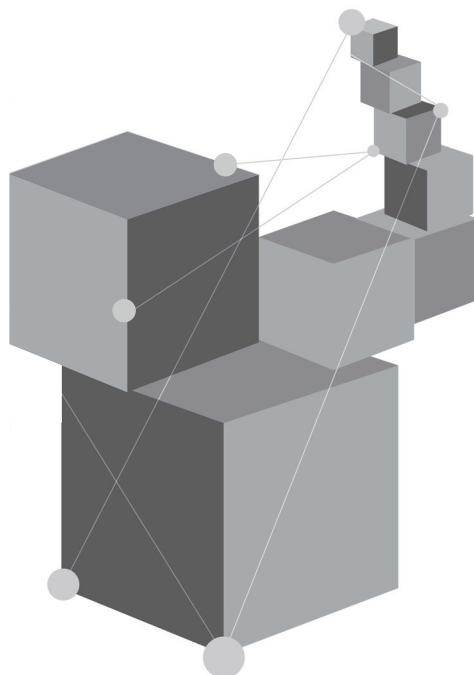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1.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 2013-1020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기일보 발행인 임 창 열

〈주문〉

경기일보 2013년 1월 2일자 11면 「새정부 '복지정책' 수조원 소요 ... 지방세 '대수술'이 답이다」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해 치러진 총선과 대선의 키워드는 '복지'였다.

양극화 해소 및 빈곤층 해소를 위해 여야는 온갖 복지정책을 쏟아냈으며, 박근혜 당선인 역시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목표 아래 '생애 주기별 공약'과 계층별 공약'을 기초로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여성 등을 포함한 사회 소외 계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제시했다.(하략)』



〈경기일보 2013년 1월 2일자 11면〉

2. 위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기일보는 곧 출범할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을 1개 면을 할애해 다루면서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사진 2장을 게재했다. 사진 내용으로 미뤄 김지사가 복지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에 관한 사진설명은 전혀 없다.

경기일보가 이처럼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김 지사의 사진을 아무 설명도 없이 크게 실은 것은 경기도의 유력 정치인인 김 지사의 도정활동을 알리는 것을 돕기 위한 신문 제작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10조 「편집지침」 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43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기일보 발행인 임 창 열

〈주문〉

경기일보 2013년 2월 6일자 5면 「“가평군수 적임자는 ‘장기원 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진용 전 가평군수가 중도 낙마함에 따라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원 가평군위원의 군수출마를 청원하는 간담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장 의원 지지모임인 ‘장기원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회원 30여명은 5일 가평

군의회에서 장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4월 보궐선거에 군수로 출마해 줄 것을 청원했다.

각 읍·면 대표로 참석한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역대 군수들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불미스런 사태로 중도 낙마함에 따라 군민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 의원이 군수에 출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장 의원은 평소 강직하고 청렴결백한 생활과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군민의 신망을 받아 왔으므로 군수로서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모씨(47·가평읍)는 “지방자치 개막과 함께 민선 단체장으로 선출된 역대 군수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불의와 타협하는 사례가 발생,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군수 직을 상실하고 군수가 없는 행정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의정활동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은 장 의원이 보궐선거에 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출마를 권유했다.

한편, 장 의원은 30여년간 공직생활을 거쳐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가평군의원으로 당선, 제6대 전반기 가평군의장을 역임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기일보의 위 기사는 장기원 가평군 의원의 지지자들이 오는 4월 가평군수 보궐선거에 장의원의 출마를 촉구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장의원 지지모임인 ‘장기원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회원 30여명이 가평군의회를 방문해 장의원에게 군수 출마를 ‘청원’했다. 기사는 이들 지지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각 읍면 대표로 참석한 이들』이라고 대표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장의원은 평소 강직하고 청렴결백한 생활과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군민의 신망을 받아 왔으므로 군수로서 적임자”』라는 지지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으로 장의원을 부각시켰다.

가평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출마예상자의 정치적인 활동은 뉴스거리이긴 하다. 그러나 특정 정치인을 부각시키려는 목적의 출마 촉구 간담회를 사진과 함께 박스기사로 처리한 것은 해당 정치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참고로 장 의원은 이 간담회 있은 후 일주일 뒤인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군수로 출마해 가평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응하는 것이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 소견을 출마명분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러한 기사는 신문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③(사회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44 신문윤리강령 위반

충청투데이 발행인 정 남 진

〈주문〉

충청투데이 2013년 2월 1일자 4면 「염홍철 대전시장 1억여원 쾌척/비서진조차 몰랐던 ‘나눔 선행’」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충청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화향천리행 인덕만년훈(花香千里行 人德萬年薰)’

중국 제후나 선현들의 일화나 우화를 엮어 놓은 설원(說苑)이라는 고서집에 나오는 말로, “꽃 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의 덕은 만년 동안 훈훈하다”는 얘기다.

염홍철 대전시장이 취임이래 비서진조차 모르게 통 큰 ‘기부’를 꾸준히 실

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식된 도리, 부모된 의무’마저 외면하고 세상과 돌아앉은 일이 비일비재한 각박한 세상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세상의 냉기를 조용히 감싸온 것이다.

최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만원을 쾌척한 사실을 알고 취재를 요청하자, 염 시장은 “자칫 생색내기로 비쳐지지 않을까 조심스럽다”며 한사코 인터뷰를 마다했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기부금 지출 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염 시장이 민선 5기 취임 이후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무려 9629만원에 이른다.

그동안 복지시설에 의료용 침대나 난방용 주유권 등을 전달하는 등 남몰래 쾌척한 기부금까지 취합하면 역대를 훨씬 초과한다.

1억원 이상을 한꺼번에 기부하거나 5년내 완납기로 약정한 기부자를 회원으로 하는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의 가입액을 훨씬 능가하는 기부액이다.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가 덧나서 금방이라도 살점을 앗아갈 것 같은 가난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 줌의 희망이라도 전달하기 위한 염 시장의 실천적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염 시장은 2010년 복지시설인 자혜은빛마을, 사랑의 집, 나사렛집 등 7개 단체에 3418만원을 기부했고, (사)어린이재단과 대한적십자사 등에 154만원 등 총 3572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도 복지시설 효광원을 비롯해 YMCA 여성쉼터, 사랑의 집 등 16개 단체에 2905만원, 어린이재단과 적십자사에 118만원 등 총 3023만원을 기부했다.

지난해에도 복지시설 다모아지역아동센터, 시온보육원, 벤엘의 집 등 16개 단체에 2534만원을 기탁했다.

가난과 질병 때문에 손톱발톱도 지쳐 울고, 생의 등짐이 등뼈를 파고드는 아픔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더 없이 고마운 선업(善業)이 아닐 수 없다.

염 시장은 또 충남대에 장학금 10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 대전시티즌

축구 관람티켓 6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여러 보육원에 전달하는 한편, 노인요양시설에는 수시로 과일과 음료를 보내기도 했다. 염 시장은 공직선거법 등을 의식해 각종 시설에 익명으로 지원해왔으며, 이 같은 심부름을 담당하고 있는 한 명의 비서 외에는 다른 비서진 조차 전혀 알지 못하게 ‘나눔의 선행’을 몸소 실천해왔다.

비서실의 한 직원은 “누구도 모르게 전달해주고 오라고 말씀하시며 늘 ‘함구령’을 내리셨다”며 “월급을 쪼개거나 사재를 털어 기부하는 등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꾸준히 실천해왔다”고 귀띔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청투데이의 위 기사는 염홍철 대전시장의 ‘나눔 선행’ 행적을 ‘미담’으로 전하고 있다. 기사는 염시장이 민선5기 취임 이후 2010년부터 매년 수천만원씩 기부해 최근까지 그 금액이 9,629만원에 달했다면서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가 덧나서 금방이라도 살점을 앗아갈 것 같은 가난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 줌의 희망이라도 전달하기 위한 염 시장의 실천적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자치단체장이 어려운 지역민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적극 권장할 사안이다.

그러나 정치인의 기부행위와 관련된 기사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이로 인해 빚어질 여러 가지 폐단 때문이다. 기사를 보면 염 시장 역시 공직선거법 등을 의식해 각종 시설에 익명으로 지원해왔다고 한다. 그런데도 기사는 연도별로 염시장이 기부한 단체와 금액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각종 시설에 익명으로 지원해 왔다’는 염시장의 주장이 기사를 통해 무색해진 셈이 됐다.

따라서 특정 정치인의 ‘나눔 선행’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대서특필한 것은 그 선행에 주목했기 보다는 해당 정치인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 자세는 신문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72 신문윤리강령 위반

충청투데이 발행인 정 남 진

〈주 문〉

충청투데이 2013년 3월 1일자 4면 「“이왕이면 거물급이 나왔으면 …”/JP 텃밭 영향 기대치 높아/이완구 전 충남지사 급부상」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충청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어차피 재선거하게 된 마당에 이왕이면 거물급 인사가 출마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꼭 투표는 할 생각이야.” 새누리당 김근태 국회의원(부여·청양)이 28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벌금 700만원)를 받으면서 부여군과 청양군 일대가 술렁이고 있다. 이날 부여군 구아리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법원 판결에 안타까워하면서도 내달 열리는 재선거에 다양한 의견을 타진하고 있었다.

이미 김 의원은 회생 불가능한 터라 지역 정가와 민심은 수면하에서 재선거로 선회했다.

부여·청양 지역은 김종필 전 총리(JP)를 비롯한 거물급 정치인들의 ‘손때’가 묻은 곳이어서 지역민의 눈높이와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상황.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박모(43) 씨는 “부여는 이미 재선거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며 “누가 출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계속해서 급부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지역은 이완구 전 충남지사의 출마설에 들뜬 분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전 지사는 지난해 1월부터 10여개월 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으로 투병생활을 해오다 대선을 앞두고 정가로 복귀했다. 최근에는 병원으로부터 ‘완치’ 판결을 받아 이 전 지사의 정치 재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면서 지역에서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부여는 이 전 지사가 민선 4기 도지사 재직 당시 업적을 남겼던 지역이어서 지역민 입에 더욱 오르고 있다”며 “이 전 지사는 한국형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롯데부여리조트 설립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이모(56) 씨는 “지난 총선 때 이 전 지사가 이 지역 출마도 검토하지 않았느냐”며 “암 투병을 이겨낸 만큼 이 지역에서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상 이 전 지사 외에는 대항마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통합당을 지지한다는 군민도 만났다. 그는 “안타깝다”만 연신 되풀이하며 혀를 내둘렀다. 민주당 박정현 부여·청양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충남도 정무부지사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 박 위원장이 부지사로 떠나면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후보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후문도 지역 내 돌고 있었다. 오후 3시30분 청양군의 상황도 비슷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이완구 전 지사가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내놨다. 이 전 지사의 시선이 오히려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로 향할 수 있다는 것. 약 1년의 휴식기를 거쳐 대전·충남 지역 광역단체장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전 지사 한 측근은 “이 전 지사는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며 지사직을 내려놓기는 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만큼 충남지사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만약 재선거로 마음을 굳힌다면 늦어도 3월 초에 이 전 지사가 견해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 전 지사에 대한 다양한 행선지가 나오는 것은 충청권에 김종필,

이회창, 심대평 등을 이은 대표하는 인물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대선에서 표심으로 증명된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인기가 식지 않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청투데이의 위 기사는 4월 24일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부여 청양 선거구의 현장 분위기를 전하는 르포기사다.

기사는 재선거에 대한 이 지역 유권자와 정치권의 의견을 다루고 있으나 주된 골자는 출마 예상자들 중의 1인인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정육점과 채소가게를 각각 운영하는 40대와 50대의 주장을 인용해 『이 전 지사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이 전 지사 출마설로 들뜬 분위기다』, 『이 전 지사 외에는 대항마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이 전 지사를 부각시켰다.

또 『이 전 지사는 지난해 1월부터 10여개월 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으로 투병생활을 해오다 대선을 앞두고 정가로 복귀했다』고 기술하고, 지역 정치권 인사의 『부여는 이 전 지사가 도지사 재직 당시 업적을 남겼던 지역』이라는 말은 전함으로써 이 전 지사의 치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밖에 기사는 이 전 지사에 대해 『충청권에 김종필, 이회창, 심대평 등을 이은 대표인물』로 평가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인기가 식지 않는』 것으로 보도했다.

이처럼 위 기사는 다양한 취재원을 동원해 이 전 지사 만을 부각시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다. 같은 지면에는 이 전 지사 외에 부여 청양 재선거 출마 예상자 6명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지만, 위 르포기사에선 이들 후보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위 기사가 객관성,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인용된 취재원 모두는 익명이다. 익명 취재원을 인용한 내용은 대체로 기자의 의견과 사실이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곤 익명 취재원의 인용을 원칙적으로 금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객관적인 정보를 알리는 보도기사가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선거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보도 자세는 신문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①(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 2012-113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2.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주 문〉

일간스포츠 2012년 8월 13일자 22면 「홍명보 올림픽팀 감독, 슈트에서 빛이 난다 했더니 ... /닥스로 완성한 ‘감독의 품격’」 기사와 제목, 스포츠동아 8월 17일자 15면 「“우리는 호텔로 캠핑 간다/롯데호텔 제주의 이색 유혹」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일간스포츠, 스포츠동아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간스포츠)= 『2002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었던 홍명보 올림픽 축구 대표 감독이 10년이 지난 2012년 또 한번 전국민을 감동의 도가

니로 몰아넣었다. 대한민국 축구 사상 최초 올림픽 4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그는 이번 기회에 세계적인 지도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무표정한 모습으로 일관하지만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면 환한 미소를 보이는 홍명보 감독은 이번 올림픽에서 평소보다 패셔너블한 스타일링을 선보여 더욱 눈길을 끌었다. 평소 트레이닝복 등 편한 차림이었던 홍 감독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공식 경기에서만큼은 수트로 젠틀한 모습을 선보였다.

2012 런던 올림픽에 출전한 홍명보 감독을 응원하기 위해 LG패션(대표 구본걸)의 닥스(DAKS)에서는 그를 위한 특별 수트를 헌정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특히 사회적 책임과 창의적 시대정신을 이끌어가는 이를 리더로 선정하는 닥스 '영리더 캠페인'의 영리더로 선정되면서 평소와는 다른 모습의 화보를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 수트 특징

올림픽 평가전부터 본선 경기까지 1회(7월 20일 세네갈전)를 제외하고는 줄곧 닥스의 수트를 입었던 홍 감독은 체격에 맞춰 슬림하고 실루엣이 드러나는 핏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 그가 입었던 수트는 닥스만이 가진 포워드 피치 시스템을 사용해 인체곡선에 맞는 부드러운 어깨모양이 특징. 홍감독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한층 가벼워진 비접착 사양을 접목한 것이 돋보인다. 또한 더운 날씨를 고려해 제나의 쿨이펙트(Cool Effect 체감온도를 3~4도 낮춰주는 기능보유), 로로피아나의 서머용 강연소재(청량한 촉감)를 사용해 기능성을 높였다.

◇ 컬러 활용법

남성 정장의 기본인 블랙이 아닌, 그레이나 네이비 컬러를 입어 젊은 감각을 강조한 홍감독은 타이 컬러를 달리하는 센스를 발휘했다. 생기 있으면서도 활동적인 이미지를 주는 와인색 넥타이를 주로 착용했던 홍명보는 네이비 수트를 입었던 7월 14일 뉴질랜드 평가전과 26일 멕시코 전에서는 블루톤 타이를 매치했다. 블루는 신뢰감을 주는 컬러로, 남성들이 선호하는 색이기도 하다.』

(스포츠동아)=『불별 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자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막바지 여름휴가를 즐기려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 바다의 풍광을 감상하면서 무더위를 피하기에 제주도만한 곳이 없다. 요즘 서귀포시 중문 단지에 위치한 호텔에는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려는 여행객들이 많다. 호텔들도 투숙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다양한 시설과 이벤트를 마련하고 나섰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캠핑’ 문화를 경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다.

◇ 럭셔리한 캠핑의 추억

중문 관광단지에 있는 호텔들은 캠핑 상품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가족 단위 투숙객이 많은 롯데호텔 제주는 야외 풍차 라운지 주변에 11개동의 캠핑존을 만들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호텔 안에 있는 300평 규모의 천연 잔디 정원에 최고급 캠핑 트레일러를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최대 레크레이션 트레일러 제조사인 포레스트 리버사의 최신 모델 SV301, SV302, SV305 등 세 가지 모델 6대를 들여와 투숙객들에게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잔디 정원에 설치한 캠핑 트레일러는 차체 길이가 11m에 높이가 3m, 넓이는 2.4m로 넉넉한 공간을 자랑한다. 내부도 최신 사양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고급 내장재와 침대, 소파는 기본이고 TV, 플레이 스테이션, 보드게임, 노래방 기기가 있어 여유로운 캠핑을 즐길 수 있다. 롯데 호텔은 이번에 트레일러 캠핑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6억원의 비용을 투입했다.

아쉽게도 현재 캠핑 트레일러에서 숙박은 불가능하다. 마치 계곡 펜션에서 숙박객들에게 평상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투숙객들이 더욱 편안하고 특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호텔 품격에 맞는 고객 편의시설을 제공한다고 보면 된다.

◇ 아빠는 ‘1일 요리사’

캠핑의 특징은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롯데호텔제주는 이

리한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호텔 직원들의 손길을 가급적 배제했다.

이용객이 직접 1일 요리사가 돼 가족과 연인에게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조리사 유니폼을 입은 아빠가 아내와 자녀에게 바비큐를 직접 구워 주는 ‘아빠는 요리사’ 컨셉트는 단란한 가정을 중시하는 ‘네스팅족’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호텔 서비스인 만큼 품격이 높다. 정원에서 즐기는 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모든 식기류를 고급화했다. 트레일러 주변에 라탄 스타일 캐노피(지붕같은 덮개)를 설치해 자연에서 특급호텔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기분을 느끼도록 했다. 제공하는 메뉴도 서귀포시와 독점 공급 협약을 맺어 제주 청정한우 보들걸 꽃등심을 비롯해 제주산 흑돼지 오겹살, 랍스타 등 푸짐하다. 이 밖에도 참치 해체 쇼 등 볼거리도 제공하고 푸아그라와 캐비어 같은 세계 진미를 맛볼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이용금액은 성인 기준으로 점심 8만원, 저녁은 요일에 따라 11만원에서 12만원이다. 어린이세트 메뉴는 4~5만원이다(세금 별도)』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올림픽축구 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올림픽 경기에서 LG패션이 유통·판매하는 닥스 브랜드 양복들을 입었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대형 사진들을 곁들여 한 면을 닥스 광고와 다름없이 꾸몄다.

큰 제목은 「닥스로 완성한 ‘감독의 품격’」, 먼 제목은 「‘닥스’ 영리더 홍명보 감독」으로 닥스를 선전하는 광고 카피를 방불케 했고, 닥스가 제공한 3장 등 모두 9장의 사진이 함께 게재됐다.

스포츠동아는 롯데호텔 제주가 피서철을 맞아 정원에 설치한 캠핑 트레일러를 감성적인 제목에다 홍보성 짙은 문구를 곁들여 톱 박스 기사로 돋보이게 소개했다.

이 같은 기사들은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

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41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 문〉

매일경제 2012년 7월 30일, 8월 6일, 8월 13일, 8월 20일자 「TOUR WORLD」 섹션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매일경제는 「TOUR WORLD」라는 위 적시 12면짜리 섹션을 통해 국내외 관광지를 다양한 사진을 곁들여 장점 위주로 소개하면서 ‘△상품정보’ 등을 통해 특정 여행사가 판매 중인 해당 관광지 여행상품과 연락 전화번호를 알리는 기사를 덧붙여 게재했다. 또 여행 전문가가 쓴 일부 기사 말고는 대부분 기사에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크레디트가 없고, 섹션 중간에는 일부 해당 여행사의 광고를 함께 실었다.

이는 관련 업체가 제공한 홍보성 자료를 별다른 검증 과정 없이 게재하여 특정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매일경제의 이 섹션은 2012년에 들어서서만 제850차~제855차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6회 연속 같은 위반행위로 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4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3.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4.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5.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주 문〉

머니투데이 2012년 7월 18일자 11면 「休S~든든한 보험」 관련 기사 5건, 8월 17일자 9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보험」 관련 기사 4건, 헤럴드경제 7월 19일자 18면 「여름방학 알찬학습/놀이·학습 병행 ... 우리 아이 가을 성적 기대 되네!」 제목 관련 기사 3건, 19면 「우리가족 알뜰유가/혜택 많은 카드 다 챙겼으니 ... 알뜰바캉스 출발」 제목 기획 관련 기사 4건, 7월 20일자 18면 「여름 휴상품/누려라! 이벤트 잔치 ... 즐겨라! 스포츠 축제」 제목 기획 관련 기사 9건, 7월 26일자 22, 23면 「여름철 보험상품」 관련 기사 9건, 7월 30일자 29면 「피서철 재테크/내주식 놔두고 휴가 못가? ...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있으매 휴~」 제목 기획 관련 기사 6건, 8월 20일자 17면 「여름, 이 맛!/더위에 지친 내 몸 '에너지 충전」 제목 기획 관련 기사 7건, 경향신문 7월 24일자 18, 19면 「기업 여름 이벤트」 관련 기사 12건, 서울경제 7월 25일자 30, 31, 32면 「내 스타일에 꼭 맞는 수입차」 관련 기사 8건, 국민일보 7월 30일자 16면 「재테크/보장 세분화·은퇴시장 공략 ... 차별화로 불황 맞선다」 제목 기획 관련 기사 7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5개 신문들은 특집·기획면을 통해 여러 가지 주제를 내세워 특정 기업이나 상품들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특정 업체가 알려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홍보성 기사라는 의심을 살 수 있고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항(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64 신문윤리강령 위반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주 문〉

내일신문 2012년 9월 18일자 18면 「환절기 피로회복제, 아로나민제품/일동제약 “종합비타민영양제 폭 넓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3번의 태풍이 지나가고 절기가 바뀌면서 낮과 아침저녁의 기온차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환절기에는 피부는 긴장하고 피로가 더해진다. 이럴수록 제때 식사하고 충분히 잠자는 게 건강유지에 중요하다. 더불어 영양제나 건기식을 챙겨 부족한 영양상태를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절기 피로에 적합한 영양제가 여럿 있다. 그 중 일동제약이 출시한 아로나민 제품군은 다양한 효과를 지닌 종합비타민제이다.

아로나민 제품군에는 피로회복제인 아로나민골드, 노화예방제인 아로나민 씨플러스, 눈영양제인 아로나민아이, 노년층을 위한 영양제 아로나민이엑스 등 4종류가 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제품군이 직장인과 학생과 노인 등 사용자의 건강상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 출시했다”라며 그 장점을 설명했다.

일동제약에 따르면 아로나민골드는 피로회복, 눈 피로, 신경통에 효과가 있다. 활성비타민B군, 비타민C, E를 함유하고 있다. 이 중 활성비타민B군은 피

로물질을 배설시켜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아로나민씨플러스는 활성비타민B군에다 비타민C, E와 셀레늄과 아연 등 1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보강됐다. 비타민C는 콜라겐 형성을 도와주고 멜라닌 색소 침착을 완화시켜줘 깨끗한 피부를 유지시켜 준다. 또 철분과 염산을 함유하고 있어 달거리로 철분 손실이 많은 여성의 빈혈 예방에 좋다. 이로써 젊은 층과 여성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아로나민아이는 안구건조증, 시력 감퇴, 망막질환의 예방과 치료보조에 도움을 준다. 활성비타민B군과 비타민A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중 활성비타민B군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 눈의 피로를 개선해준다. 함유된 아연은 눈의 정상적인 기능을 돕는다.

아로나민엑스는 고함량으로 비타민B군은 혈중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낮춰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또 세포내 에너지 대사를 원활히 해 만성 피로의 개선에 효과적이다. 이로써 신경의 통증을 유발하는 피로물질을 배출시켜 신경, 근육,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은 위 기사에서 일동제약이 생산하는 종합비타민제 아로나민 4가지 제품을 장점 일색으로 돋보이게 소개했다.

기록에 따르면 기사가 소개한 아로나민 제품군 가운데 아로나민골드는 1963년 처음으로 선보인 아로나민의 후속 제품이고, 아로나민씨플러스와 아로나민아이는 2003년부터 '시리즈 제품'으로 출시됐으며 아로나민이엑스는 2009년에 생산됐다. 한마디로 새로운 게 없는 제품들이다.

그런데도 기사는 일동제약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제품군이 직장인과 학생과 노인 등 사용자의 건강상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 출시했다”』고 소개해 마치 이 제품들이 근자에 나온 것으로 오해케 했다.

내일신문은 5월 29일자 18면에도 「일동제약 아로나민, 국민영양제로 자리매김/50년간 국내 비타민 1위 브랜드」라는 제목으로 아로나민 제품군을 소개

하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보다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홍보성 기사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14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 문〉

東亞日報 2012년 10월 25일자 B5면 「8000분의 1초/정밀한 기계가 그려내는 절대미학」 기사와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사랑을 포착한다. 가슴 따뜻한 기술로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순간.

서로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그리고 미래의 계획을 푸근한 마음으로 나누는 순간. 그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사물이 있다.

카메라. 현대사회를 만들어낸 놀라운 빛의 예술이다. 그냥 말로만 하기엔 너무 벅차다.

찰칵. 그 셔터의 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안다. 그 순간의 미학이 지닌 아름다움을. 마음의 눈꺼풀이 한번 열렸다 닫히는 것 같은 순간의 설렘을.

캐논 카메라. 아주 오래전 사진기의 대명사로 알고 있었던 그 캐논 카메라가 첨단 기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東亞日報 2012년 10월 25일자 B5면〉

첨단기술, 광속의 공을 잡아채다

“플레이오프 1차전이 벌어진 인천 문학구장, 사진기자의 위치는 외야펜스 바로 뒤. 타자와의 거리는 120m. 사용렌즈는 약간의 떨림에도 사진을 흔들리게 만드는 800mm 렌즈. 야간경기라 빛이 모자라는 열악한 상황. 조리개 5.6 감도 2500. 프레임 안에 공이 들어오는 경우는 평균 2장. 사진기자의 셔터감각과 카메라의 기계적인 순발력이 갖춰져야 되는 상황.”

바로 16일 있었던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SK 롯데의 경기에서 이호준의 홈런 상황이다. 동아일보의 한 사진기자는 홈런을 치는 이호준의 배트와 공까지 완벽하게 잡아냈다. 이러한 상황을 사진으로 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캐논의 플래그십 DSLR 카메라 'EOS-1DX' 라면 그리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현존하는 DSLR 중 최고로 1800만 화소 풀프레임 센서로 초당 약 12장 연속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61포인트 고정밀 AF 기능도 갖고 있다.

관음, 1000개의 눈 세상을 담다

캐논이 올 6월 출시된 최고의 성능을 가진 플래그십 DSLR 카메라 'EOS-1DX' 로 업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출시된 모든 카메라의 스펙을 이 카메라가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프로 사진 기사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캐논의 창립자 요시다 고로는 1933년 자신이 만든 최초의 카메라 이름을 '관음'이라고 붙였다. '관음'은 일본어로 '콰논(Kwanon)'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불교의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뜻한다.

1000개의 손과 눈을 갖고 세상 모든 것을 굽어보는 관세음보살과 같이 세상 모든 곳을 사진에 담아낼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들고 싶어 했던 창립자의 발원이다. 지금은 '공생'을 기업이념으로 삼고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는 「포토&」라는 문패 밑에 한 개 면에 삼등분한 대형사진 3장을 싣고 첫 번째 사진에는 「8000분의 1초/정밀한 기계가 그려내는 절대미학」이라는 광고카피성 제목을, 두 번째 사진에는 감성적인 표현과 홍보성 짙은 문구가 어우러진 위 적시 기사를 게재해 캐논 카메라라는 특정 상품을 이례적으로 눈에 띄게 소개했다.

기사는 『아주 오래전 사진기의 대명사로 알고 있었던 그 캐논 카메라가 첨단 기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캐논이 올 6월 출시된 최고의 성능을 가진 플래그십 DSLR 카메라 'EOS-1DX' 로 업계 선

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프로 사진가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등 광고 문구와 다름없는 노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기사 첫머리와 중간에도 「사랑을 포착한다. 가슴 따뜻한 기술로」, 「첨단기술, 광속의 공을 잡아채다」, 「관음, 1000개의 눈 세상을 담다」 등 감성을 자극하는 작은 제목을 달았다.

카메라와 관련한 세 컷의 대형사진 가운데 하나는 캐논 상표가 선명하게 나타난 캐논 카메라 몸체 뒷부분을 찍은 사진이다.

이 같은 지면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특정 업체 제품의 홍보나 신문사의 영리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1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윤 두 영
2. 경북일보 발행인 정 정 화
3. 대구일보 발행인 이 태 열

〈주 문〉

경북도민일보 2012년 11월 15일자 5면 「경제도시 구미 임은지구 삼도뷰엔 빌W 뜬다」 제목의 기사, 경북일보 11월 15일자 16면 「생활·자연·교통·교육 4박자 갖춘 명품 대단지」 제목의 기사, 대구일보 11월 15일자 11면 「구미 프리미엄 중소형 994가구 분양」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경북도민일보, 경북일보, 대구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북도민일보)=『도내 으뜸의 산업경제도시 구미 임은지구에 삼도뷰엔빌W가 16일 드디어 문을 연다.

이곳 단지는 생활, 자연, 교통, 교육 4박자를 모두 갖춘 명품 중소형 프리미엄 대단지로 각광받는 곳.

아파트의 가치를 높여주는 입지적인 조건에서 구미 임은 삼도뷰엔빌W는 완벽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중략)

임은 삼도뷰엔빌W 아파트는 59㎡(구 24형), 76㎡(구 30형), 84㎡(구 32형)의 중소형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획기적인 와이드 평면 설계 적용으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였다. 특히, 84㎡(구 32형)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구미 최초의 4개의 침실이 적용된 평면 설계를 선보여 소비자들의 반응이 기대되며, 거품을 뺀 합리적인 분양가로 스마트한 소비자들에게 귀추가 주목된다.

- 다양한 테마파크 구성

단지 내에는 워터월드, 블루스퀘어, 조이폴랜드, 보물섬어드벤처, 웰빙산책로, 편편코트, 멀티코트 등 다양한 테마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휘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실내골프연습장, 키즈룸, 카페, 문고, DVD실, 입주자회의실, 스터디룸 등 완벽한 커뮤니티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최고가 아니면 짓지 않는 주택건설명문 삼도주택.(후략)』

(경북일보)=『이번에 분양하는 임은 삼도뷰엔빌W는 생활, 자연, 교통, 교육 4박자를 모두 갖춘 명품 중소형 프리미엄 대단지로 아파트의 가치를 높여주는 입지적인 조건에서 완벽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중략)

임은 삼도뷰엔빌W 아파트는 59㎡(구 24형), 76㎡(구 30형), 84㎡(구 32형)의 중소형 대단지로 구성돼 있으며, 획기적인 와이드 평면 설계 적용으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특히, 84㎡(구 32형)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구미 최초의 4개의 침실이 적용된 평면 설계를 선보여 소비자들의 반응이 기대되며, 거품을 뺀 합리적인 분양가로 스마트한 소비자들에게 귀추가 주목된다.

단지 내에는 워터월드, 블루스퀘어, 조이폴랜드, 보물섬어드벤처, 웰빙산책로, 편편코트, 멀티코트 등 다양한 테마파크로 구성돼 있으며, 휘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실내골프연습장, 키즈룸, 카페, 문고, DVD실, 입주자회의실, 스터디룸 등 완벽한 커뮤니티시설이 갖춰져 있다.(중략)

특히 최근 분양한 포항시 우현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는 포항지역 최고의 경쟁률인 42대1의 경이적인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주택경기침체 속에서도 계속되는 성공분양신화를 이어가고 있다.(후략)』

(대구일보)=『생활, 자연, 교통, 교육 4박자를 모두 갖춘 명품 중소형 프리미엄 대단지가 구미에 온다.

16일 구미에서 오픈하는 구미 임은 삼도뷰엔빌W는 입지적인 면에서 완벽한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중략)

임은 삼도뷰엔빌W 아파트는 59㎡(24형), 76㎡(30형), 84㎡(32형)의 994세대 중소형 대단지로 획기적인 와이드 평면 설계를 적용,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특히, 84㎡의 경우 구미지역 최초로 4개의 침실이 적용된 평면 설계를 선보여 소비자들의 반응이 기대되며 거품을 뺀 합리적인 분양가로 스마트한 소비자들에게 귀추가 주목된다.

단지 내에는 워터월드, 블루스퀘어, 조이폴랜드, 보물섬어드벤처, 웰빙산책로, 편편코트, 멀티코트 등 다양한 테마파크로 구성돼 있으며 휘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실내골프연습장, 키즈룸, 카페, 문고, DVD실, 입주자회의실, 스터디룸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갖춰져 있다.

구미 임은 삼도뷰엔빌W는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삼도주택에서 짓는다.

삼도주택은 새로운 트렌드가 홍수를 이루는 주택건설분야에서 합리적인 분양가, 품질, 고객만족 등 고객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최고의 아파트 건설을 고집해왔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도민일보, 경북일보, 대구일보의 위 기사는 각각 삼도주택이 경북 구미 임은지구 삼도뷰엔빌W를 분양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들은 『입지적인 조건에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교육프리미엄도 뛰어넘으며』 『완벽한 커뮤니티시설』 『획기적인 와이드 평면 설계를 적용, 공간 활용을 극대화』 등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최상급 수식어를 붙여 아파트 단지의 장점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해당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경이적인 청약 경쟁률을 기록』 『성공분양신화』 『최고의 아파트 건설을 고집』 등의 표현을 사용해 돋보이게 했다.

기업의 아파트 분양 홍보용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러한 내용은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사실보도의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의 아파트 분양을 도우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성과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5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2.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3.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4.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5.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 문〉

朝鮮日報 2012년 11월 26일자 「이화여자대학교」, 11월 29일자 「국민대학교」, 12월 3일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2월 7일자 「건국대학교」, 12월 10일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섹션, 한겨레 11월 29일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섹션, 중앙일보 11월 30일자 「성균관대」, 12월 6일자 「한양대 ERICA」, 12월 10일자 「이화여대」, 12월 12일자 「숙명여대」, 12월 13일자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섹션, 東亞日報 12월 3일자 「글로벌KU, 건국대」 섹션, 매일경제 12월 3일자 「영남대학교」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5개 신문은 입시철을 맞아 특정 1개 대학만을 소개하는 4면, 8면짜리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여러 건의 해당 대학 광고들을 함께 게재했다.

섹션은 홍보성 짙은 제목과 문구를 곁들여 해당대학의 특성과 대표 학과, 교수진, 시설, 장학제도와 더불어 입학전형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기사들과 사진들로 채워졌다.

이 같은 섹션은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더러 광고 유치를 위해 제작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독립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2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3.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4.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 영 권

〈주 문〉

경향신문 2013년 1월 10일자 18면(특집) 「커피전문점 시장 포화상태, ‘멀티카페’ 시대 열린다」 제목의 기사, 「“망고 디저트 전문점 ‘웰빙’테마로 차별화”/커피왕서 새출발 ‘망고식스’ 오픈한 강훈 대표」 제목의 기사, 「망고식스 ‘웰빙·로가닉’ 음료 6선」 제목의 기사 등 7개의 단신 기사, 매일경제 1월 10일자 B4면(상품장터) 「기술력으로 승부거는 이색제품」 면제목의 기사 6건, B5면(상품장터) 「중소기업 튀는 제품 한자리에」 제목의 기사 8건, 내일신문 1월 14일자 16면(산업) 「우수 중소기업 히트상품샵으로 오세요」 제목의 기획 기사 6건 등 9건, 머니투데이 1월 17일자 15면(겨울철 건강지킴이) 기획의 기사 4건, 파이낸셜뉴스 1월 17일자 24·25면(기획) 「 주목받는 분양단지/최고의 교통망·첨단 기술·넓은 녹지 … 편리함을 누리세요/노른자 입지·착한 분양가·대규모 단지 … 입맛대로 고르세요」의 기사 8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상기 5개 신문은 각각 1개면 또는 2개면 전체를 할애하여 특정한 음료나 생활용품, 건강식품과 약품, 분양 아파트를 다룬 기사들을 게재했다.

경향신문은 망고식스라는 음료회사와 관련 상품들과 회사대표, 매일경제와 내일신문은 여러 가지 생활용품, 머니투데이는 여러 가지 건강식품이나 약품, 파이낸셜뉴스는 분양 아파트들에 대해 각각 장점 위주의 홍보 기사를 게재했다.

이러한 기사들은 특정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유지라

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편향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2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인일보 발행인 송 광 석
2.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3.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울
4. 중부매일 발행인 장 덕 수
5. 부산일보 발행인 이 명 관
6. 경상일보 발행인 배 명 철
7. 每日新聞 발행인 이 창 영
8. 中都日報 발행인 김 원 식

〈주 문〉

경인일보 2013년 1월 3일자 8면 「홍삼 최고봉 천삼 대량생산 소비자 부담 없이 구입 매력」 제목의 기사, 영남일보 1월 3일자 15면 「자전거의 고정관념을 버려라 개성 톡톡 ‘나만의 두바퀴’/수제 자전거 전문 생산 〈주〉바오 김영한 대표」 제목의 기사, 중부일보 1월 3일자 16면 「감동 의료서비스 분당제생병원/날카롭되 따뜻한 ‘제생 명의’들의 인술 메스」 제목의 기사 외 1건, 중부매일 1월 11일자 8면 「생명살림 실천하는 괴산 한살림축산식품/더불어 산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믿음으로」 제목의 기사 외 1건, 부산일보 1월 15일자 20면 「하이! 우리브랜드 트렉스타/”새 아이디어와 역발상이 세계적 기업 성장 비결”」 제목의 기사 외 1건, 경상일보 1월 16일자 12면 「클릭 e병원 울산엠디 치과/간단 치아미백술로 자신있게 스마일」 제목의 기사, 每日新聞 1월 18일자

16면 「피자성공 이어 ‘가마솥 닭 튀김’도 함께 웃겠다/종합 외식프랜차이즈 기업 도약하는 ‘신성마을’」 제목의 기사, 中都日報 1월 18일자 11면 「紅(홍)돈이 최고야/홍삼돼지와 크리스털 불판의 ‘환상궁합」」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적시 기사 가운데 경인일보 기사는 홍삼제조업체인 진삼가가 자체개발한 구중구포 홍삼증숙기로 홍삼을 제조했으며, 자체 검사한 결과 전체의 80%가 넘는 홍삼뿌리가 천삼등급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천삼의 효능을 강조하는 등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이 회사의 가맹점 모집도 안내하고 있다.

영남일보는 수제 자전거 전문생산 업체인 (주)바오와 회사대표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수제 자전거를 장점 위주로 자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수제 자전거의 가격과 디자인의 견고함, 편의성을 강조하고 맞춤형 특수 자전거 제작도 알리고 있다.

중부일보는 1개면을 할애해 분당 제생병원에 대해 최첨단 암치료장비 가동을 비롯해 특화된 센터를 소개하는 등 장점 위주로 보도했다. 기사는 3년 연속 급성기 뇌졸중 치료 최우수 병원 선정을 비롯해 분당제생병원의 지난해 성과를 강조하고, 병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최신 장비 도입, 건강강좌 등을 알리고 있다.

중부매일은 1개 면을 할애해 한살림축산식품과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소시지 등을 장점 일색으로 소개하고 회사 대표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부산일보는 신발제조업체인 (주)트렉스타에 대해 출시 제품을 장점 위주로 보도했다. 기사는 「대표상품」 코너를 통해 ‘코브라 630 고어텍스’라는 트레킹화를 홍보하면서 할인행사와 가격도 안내하고 있다.

경상일보는 「클릭 e병원」 코너를 통해 ‘울산 엠디치과’를 장점 위주로 홍보하고 있다. 기사는 이 치과 원장의 치료 장면 사진을 넣고 간단한 치아미백술로 하얗고 가지런한 치아를 만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每日新聞은 종합 외식프랜차이즈 기업인 ‘신성마을’과 이 회사 브랜드인

‘피자빙고’, 그리고 신제품인 ‘가마솥 닭 튀김’을 장점 위주로 보도했다. 기사는 ‘피자빙고’에 이어 ‘가마솥 닭 튀김’에 대해서도 올여름부터 가맹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中都日報는 ‘홍삼돼지고기’ 전문 프랜차이즈인 ‘紅(홍)돈이 최고야’라는 음식점을 장점위주로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이 음식점이 내놓은 밥상메뉴를 사진으로 처리하고 ‘홍삼돼지’와 ‘크리스털’ 불판의 조합을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보다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홍보성 기사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함으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45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일보 발행인 정 정 화

〈주문〉

경북일보 2013년 2월 12일자 3면 「(주)대아고속해운 황인찬 회장을 만나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확정도 안된 포항-울릉간 항로의 여객선 교체를 두고 시끄럽다.

아직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선박교체 신고서조차 접수가 안된 것은 물론 울릉군과 해운선사 간 결정된 사안은 단 하나도 없다.

다만 선사측이 지난해 12월 울릉군측에 사전 의견 검토 의사만 밝혔을 뿐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지역언론은 독점과 횡포라며 무차별적이고 근거없는 비난을 가하고 있다.

또한 대아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두고 포항의 향토기업인 (주)대아고속해운과 관련한 터무니없는 소문과 추측성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황인찬 대아고속해운 회장을 만나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최근 대아저축은행 검찰 수사 등으로 마음이 편치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 입장은 어떤지.

- 우선 대아저축은행을 책임지고 있는 동생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고객은 물론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잘못이 있다면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아는 흔히 말하는 그룹경영체제가 아니다. 우리 형제는 모든 재산이 분리 돼 있다. 저축은행은 동생이 경영한다. 그러나 형제이자 가족문제이기에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일련의 사태와 관련, 언론의 사태보도 추이가 진실보다 감정이 앞섰다고 본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대아측은 모든 일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려고 한다.

하지만 감정이 앞서가는 언론보도를 볼 때 조금 억울하다. 잘 살펴보면 대아저축은행사태도 언론이 얘기한 것처럼 인출사태가 뻔할 것이라고 하는데 예금 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언론이 인출을 부추기는 내용을 기사화 했다. 물의로 시끄럽지만 아직 인출사태가 없으며 믿고 지켜봐 준 시민 예금주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며 대아를 믿고 예금을 맡긴 예금주들에게 이번 사태로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한다면 개인적으로 사재를 털어서라도 보상하겠다는 생각이다.

△포항~울릉간 여객선 교체를 두고 일부 언론은 물론 지역에서 말들이 많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듯 한데.

-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답답하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개인적으로 누가 무슨 의도로 논란의 불씨를 지폈는지 궁금하며 특히 신문, 방송 등 일부 언론이 대아고속해운과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가했다고 본다. 일

부 언론 보도 중 호도된 내용이 너무 많다. 지난 달 10일 포항-울릉간 항로 대형선박 투입을 위해 울릉군에 사전검토 여부를 바라는 의사만 밝혔으나 갑자기 교체가 확정된 듯 전해져 주민대책위를 꾸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고 들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항-울릉간 항로 대형선박 투입은 장점이 더 많다. 승객 1천여명과 차량 120대 적재능력을 갖추고도 운항시간이 기존 선박보다 1시간 정도 늦어진다. 시간이 1시간 더 걸리는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장점이 더 많다. 울릉주민 '선포 300석 확보'와 적재량(화물칸)이 10배 정도 늘어나고 선박이 5천t이 돼서 결항률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일부 언론에 운항시간이 무려 6시간이 나 걸릴 것이라는 왜곡된 내용이 퍼지면서 맹목적인 선사 비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언론도 이에 편승한 허위과장보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일부 신문·방송이 광고와 협찬을 요구했다가 듣지 않으니까 무차별 허위과장보도를 일삼아 해운선사에 피해를 준 것이다. 사회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경북일보를 포함해 언론은 정의로운 길잡이 역할을 하며 정도를 걸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우리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포항~울릉간 항로는 대아고속해운을 비롯해 2개 회사가 운항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1개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 상태다. 때문에 대아고속해운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현재 독점이 아니다.

또한 대아고속해운이 거액의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승선료 보조금은 정부에서 도서벽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울릉군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대아고속해운은 공도 많이 있다. IMF를 거치며 주민들의 발이 끊겼을 때 위크아웃 신청할 정도로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99년부터 7~8년간 힘들었지만 주민들을 위해 운항을 계속해 왔으며, 무엇보다 대아고속해운은 지난 1996년 2천394t급 초고속 대형여객선 썬플라워호를 투입, 포항~울릉간 217km를 3시간만에 주파해 울릉도를 1일 생활권에 넣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더욱이 IMF로 회사가 어려웠을 때도 적자를 감수하며 운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주민들은 지나치게 선사의 횡포에 대해 많이 얘기하는데, 대아고속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최고의 고속선을 투입해 울릉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기여한 회사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 않은가? 이것을 망각하고 있다.

특히 성수기와 주말 때 주민들이 예약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선표를 구하려고 하다가 선표가 없으면 대아고속의 횡포를 운운하는데 과연 어느 회사가 이런 사태를 감당할 수 있는가? 예약을 하지도 않고 선표를 요구하는 주민들도 이런 점은 고쳐야 한다. 수십년간 표를 달라고 하면서 ‘독점, 횡포’라고 하는데 이제는 주민들도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번에도 일부 주민들의 감정이 가라앉지 않고 운항중지를 그토록 바라면, 과반수 이상 주민들의 뜻이 대아고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아고속은 물러갈 의사도 있음을 알아주기 바란다.

△끝으로 한 마디.

-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 이야기할 부분이 많지만 더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만 끝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 과장된 내용을 보도한 뉴시스 ○○○ 포항주재기자와 경북제일신보 ○○○ 기자는 경북일보에, 대아에 대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운운하며 칼럼을 쓴 한국일보 ○○○ 포항주재기자는 과거 대아금고에 오랜동안 근무한 적이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가 혼 혼해 지려면 최소한의 작은 정이라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아에 대해 비록 서운한 감정이 있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기사로 써야 더 멋진 기자가 되지 않겠는가?

끝으로 일련의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 이런 과오가 없도록 더욱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기업을 운영하는데 매진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부당한 언론의 허위·과장보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싶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포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대아그룹의 황인찬 회장이 최근 그룹 계열사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다룬 것이다.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대아그룹의 계열사인 대아저축은행은 불법대출혐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 대아고속해운은 포항-울릉간 항로의 여객선 교체문제로 해당 지역민과 갈등에 휩싸여 있다. 기사는 이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소문과 추측성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황 회장을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취재배경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위 기사는 거의 1개 면의 4분의 3을 할애하면서 아무런 검증노력 없이 황 회장의 주장만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기사는 내용상 황 회장 인터뷰 기사지만 인터뷰 사진도 없고, 전체 질문이 2개에 불과하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질문도 없고, 또 마무리 발언기회까지 제공하는 등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게다가 황 회장은 경북일보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 기사는 대주주의 일방적 주장을 독자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사는 신문기사의 신뢰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58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문〉

일간스포츠 2013년 2월 18일자 15면 「노안 수술 10분 만에 ... “18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안경 돋보기 없는 세상 캠페인 ①주부 노안」 제목의 관

련기사 4건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제목의 관련 기사들을 내보내면서 전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노안은 안과 전문의들도 그 동안 치료 불가능하다고 손을 놓았던 질환이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드는 노안 앞에 모두들 절망했다. 이 질환이야말로 50대 중년조차 진짜 노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평균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몸의 다른 곳이 성한들, 그런 눈을 가지고 행복한 여생을 즐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노안 환자들에게 빛이 찾아들었다. 25년 경력의 박영순 압구정동 아이러브안과 원장이 혁신적인 노안 수술법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노안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노안에 시달리다가 아이러브안과에서 노안 수술로 밝은 세상을 찾은 주부 환자들을 지난 15일 만났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전문과 관련 기사들은 일간스포츠가 ‘안경·돋보기 없는 세상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내보낸 ‘주부 노안’에 대한 기사들이다.

일간스포츠는 그러나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아이러브안과와 박영순 원장의 광고와 다를 바 없게 지면을 꾸몄다.

사례로 내세운 주부 노안 환자 3명에 대한 인터뷰 모두가 박 원장에게 수술을 받고 노안을 해결했다는 내용이고, 노안에 대한 문답 박스의 제목도 「박영순 원장 Q&A」라고 달았다.

기사들은 박 원장이 『혁신적인 노안 수술법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노안을 해결했다』고 강조할 뿐 노안 수술의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특히 지면 중간에는 박 원장과 주부 환자 1명이 함께 찍은 큼지막한 사진을 게재했다.

위 기사는 특정병원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6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每日新聞 발행인 여 창 환
2. 부산일보 발행인 이 명 관

〈주 문〉

每日新聞 2013년 1월 22일자 16면 「시승기/새옷 입은 ‘뉴 SM5 플래티넘’», 「지면으로 보는 자동차 전시장」 제목의 기사, 부산일보 2월 4일자 20면 「시승기/BMW 뉴730Ld」, 「“여럿이 타도 편안해요” 미니밴 시장 쑥쑥」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每日新聞은 자동차 기획면을 통해 최근 르노삼성자동차가 출시한 ‘뉴 SM5 플래티넘’의 시승기를 싣고, 이 신형모델을 장점 일색으로 소개하면서 「잘생겼다, 부드럽다, 강하다」라는 광고문구와 같은 제목을 달고, 자동차 내외부의 사진을 함께 실었다. 또 전시장 코너를 통해 기아차 ‘K9 2013’, 아우디코리아의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 포드코리아의 ‘포커스 디젤’, 혼다코리아의 ‘시빅 유로’ 등 5개 신형차의 사양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있다.

부산일보는 ‘오토 樂’이라는 기획면을 통해 BMW의 대형세단인 ‘뉴730Ld’의 시승기를 자동차 사진과 함께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있다. 또 미니밴 시장을 소개하면서 장점 위주로 미니밴의 가격대와 사양을 소개하고 있다. 기아차

동차의 ‘카니발R’과 토요타의 ‘시에나’는 사진과 함께 실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차원을 넘어서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으로 독자의 알권리를 왜곡하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6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3.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4.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5.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6.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주 문〉

중앙일보 별지섹션 2013년 1월 29일자 「2013년 금융트렌드」, 1월 30일자 「자동차」, 1월 30일자 「힘내자 한국경제」, 2월 13일자 「Level Up」, 한국경제 별지섹션 1월 29일자 「2013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대상」, 2월 5일자 「한경마켓팅대상」, 2월 14일자 「Better Life」, 2월 14일자 「Real Estate」, 東亞日報 별지섹션 1월 30일자 「Health & Beauty」, 2월 7일자 「Money & Lives」, 2월 7일자 부울경 방문의 해/보고싶데이 부울경, 매일경제 별지섹션 1월 30일자 「Best of Best」, 2월 6일자 「신뢰받는 공기업」, 2월 14일자 「올해의 유망펀드」, 朝鮮日報 별지 섹션 1월 30일자 「프랜차이즈」, 1월 31일자 「기업섹션/도전 2013」, 한겨레 별지섹션 2013년 1월 31일자 「불황을 넘어서」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신문들은 특정주제로 별지색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기업이나 업체, 상품들에 대해 장점 일변도의 홍보 기사를 게재했다. 위 신문들은 게다가 홍보 기사를 게재한 업체들 중 상당수의 광고를 동시에 별지색션 지면에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자사나 특정기업·단체의 영리를 위해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유지라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특정기업이나 업체에게 유리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동시에 해당 기업이나 업체의 광고를 버젓이 실는 것은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6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2.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3.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문〉

중앙일보 별지색션 2013년 1월 25일자 「기숙학원 가이드」, 東亞日報 별지색션 1월 30일자 「합격이 보이는 기숙학원」, 朝鮮日報 별지색션 2월 15일자 「2014 대입 이제부터다」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신문들은 대학입시가 끝나자 다시 대입시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기숙학원들을 안내하는 별지색션을 제작했다. 이 신문들은 각각 8면의 별지색션을 통해 많은 기숙학원들에 대해 저마다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런가 하면 기사로 다룬 기숙학원의 상당수로부터 광고를 받아

같은 섹션 지면에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자사와 기숙학원들의 영리를 위해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유지라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이처럼 지면을 통해 특정 기숙학원에게는 유리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71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경향신문 2013년 3월 5일자 18면 「“농협금융 올해 1조600억 흑자 낼 것”」 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경향신문은 출범 1주년을 맞은 농협금융의 신동규 회장이 행한 기자간담회 내용을 머릿기사로 다루고 농협금융측이 제공한 신동규회장의 대형 간담회 사진(10.5cm×18.5cm)을 나란히 게재했다. 이와 함께 이 기사 바로 밑에 농협금융이 출범 1주년을 자축하는 광고(20.5cm×30.5cm)를 함께 게재하였다.

기사의 주제목으로 뽑은 「“농협금융 올해 1조600억 흑자 낼 것”」은 신 회장의 발언 내용으로서 농협금융의 올해 경영 목표에 불과하다. 이 내용을 포함한 간담회 내용은 의례적인 간담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경제면 머릿기사로 다룰만큼 큰 뉴스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신회장의 간담회 인사말 사진을 농협금융 사보 편집을 연상케 할 정도로 크게 올린데다 기사 바로 밑에 농협금융의 광고를 게재한 것은 기사 게재와 광고 게재가 무관하지 않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85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울

〈주문〉

중부일보 2013년 2월 28일자 12면 「TV 스마트폰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사랑도 나눔도 1등」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중부일보는 위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부일보 2013년 2월 28일자 12면〉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중부일보가 광고도 없이 전면을 할애해 삼성전자의 사회공헌사업을 다룬 것이다.

중부일보는 삼성전자가 지역사회인 수원에서 벌이고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소개하면서 삼성전자로부터 제공받은 3개의 사진을 싣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직원들의 헌혈 캠페인 참여 사진’과 ‘경기도산 식자재로 식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삼성디지털시티의 사내 식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된 사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개면 가운데 절반가량을 할애해 삼성전자 로고를 넣어 게재한 TV 사진은 위 기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 특히 이 TV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발표해 주문 예약을 받고 있는 ‘85형 UHD TV 85S9’라는 신제품으로 국내엔 3월 중에, 세계 시장엔 5월 중에 출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기사와 관련이 없는 제품의 사진을 제품명과 함께 게재한 것은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져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러한 보도행태는 특정업체의 영리에 영합하기 위해 지면을 제작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10조 「편집지침」 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89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2.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3.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4.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 영 권
6.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헤럴드경제 2013년 2월 28일자 21면 「유망펀드 투자전략」 면제목 아래의 기사들, 문화일보 3월 12일자 20면 「특별기획/올봄 혼수 트렌드」 면제목 아래의 기사들, 머니투데이 3월 13일자 26면 「재형저축펀드 길라잡이」, 3월 14일자 18면 「우리 아니 지켜주는 보험」, 3월 15일자 13면 「수입차 폭풍질주」 면제목 아래의 기사들, 서울경제 3월 14일자 30면 「충간소음 막아라」 면제목 아래의 기사들, 파이낸셜뉴스 3월 14일자 12면 「기획/채권·주식·상품에 비과세 투자 … 위험분산·수익률 제고」·22면 「유통업체 3월 봄 제품」 면제목 아래의 기사들, 경향신문 3월 15일자 22면 「올봄 산행길 아웃도어 ‘실용·패션’ 바람」 면제목 아래의 기사들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신문들은 각각 1개면 전체를 할애하여 특정한 기업이나 상품·업체들을 장점 일변도의 기사로 다루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자사나 특정기업·단체의 영리를 위해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유지라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특정기업이나 업체에게 유리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제작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한 다른 기사들은 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ikpec.or.kr) 참조〉

3. 사회적 책임

▲ 2012-1171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주 문〉

한국경제 2012년 9월 24일자 A29면 「‘大選 대목’ 역술인들 말 아끼는 까닭 …」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 유〉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의도 정가(政街)의 호사가들 사이에 그럴 듯한 이유와 근거로 포장된 ‘대통령 유력 당선자’가 거론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선거철은 역술업계에선 대목 중 대목이다. 매년 총선이나 대선 때마다 ‘이름에 △자가 들어간 사람이 당선된다’ ‘누구는 올해 후반 천운(天運)을 탄다’는 얘기가 유명 역술인의 ‘극비 예언’으로 포장돼 입에서 입으로 퍼져왔다.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민주통합당 전신) 후보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간 양자 대결 구도로 전개됐던 1997년 대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 후보의 대세론이 일었지만 김 후보의 당선을 점치는 예언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결국 김 후보가 15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애초부터 김 후보의 당선을 예언했었다’는 역술인들도 넘쳐났다.

하지만 이번 대선만큼은 조금 다르다. 투표일까지 채 90일이 남지 않았지만 정가는 이상하리 만큼 조용하다. 예년과 다른 적막은 야권 후보 단일화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정국’이 지속되고 있어, 역술인들도 선불리 당선자를 점치길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예측’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무속인 심진송 씨(61)는 “(이번 대선의 경우) 후보도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역술가들도 쉽사리 대선 예측을 내놓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답답하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며 권토중래(捲土重來)하는 심정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정치인들 중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역술인들을 찾는 이들이 많다. 줄을 잘 서야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와 장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용하다’는 무속인을 찾아 전국을 돌지만 그들이 듣고 오는 건 안개 정국만큼이나 답답한 선문답(禪問答)뿐이다.

이런 가운데도 이름 있는 역술인, 무속인들 중 일부는 벌써부터 당선자를 꼽고 있다. 기자가 23일 만난 심씨와 역술가 남덕 씨(70·남덕역학연구원 원장)가 대표적이다. 심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1000일 기도를 하는 중에 조상신인 사명대사가 나타나 ‘문재인’이란 이름을 보여줬다”며 “문재인 후보는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문 후보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서로 궁합이 잘 맞아 2015년엔 통일에 가까운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도 했다. 유력 정치인들의 사주풀이로 유명해진 남씨는 “지금 최고로 운세가 좋은 사람은 안철수 후보”라며 “안 후보의 운이 90점이라면, 문 후보는 85점, 박근혜 후보는 50점 정도”라고 말했다. 남씨는 그러나 “대선은 사주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며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면 박 후보의 당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과거 대선 때와는 달리 예측불허의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역술인들도 선불리 당선자를 점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뒷부분에서는 특정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거나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무속인과 역술인의 말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이 같은 기사는 비과학적인 흑세무민성 기사로, 건전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역행하고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더러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

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95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헤럴드경제 2012년 10월 23일자 10면 「유명 女가수와 1시간에 1000만원」/ 기획사와 결탁한 신중 성매매 등장」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경고’ 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성매매업체가 일부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현직 연예인과의 성매매를 주선하고 있다. 현직 모델과 레이싱걸, 걸그룹 준비생과 만남을 가질 회원을 기존 단골손님의 입소문 등을 통해 은밀히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연예인 성매매의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업체 관계자는 “연예기획사와 결합해 성매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다. 23세 유명 레이싱걸과의 한 타임(60~70분)이 120만원 정도”라면서 “이보다 급이 낮은 피팅모델, 아이돌 연습생 등 아직 얼굴이 알려지는 않은 연예인 지망생은 6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고위 인사를 접대할 일명 ‘스타급’ 연예인을 만날 수 있느냐고 묻자 “유명 기획사에 소속된 이름이 알려진 여가수는 한 타임에 1000만원을 넘는다”면서 “만나는 것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먼저 비밀리에 접촉한 뒤 몇 번의 검증절차(?)를 거쳐 극소수만이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업체가 내세우고 있는 여성은 다양하다. 업계에서 일명 ‘가로수길 얼짤녀’라 불리며 데뷔를 앞두고 있는 21세 걸그룹 멤버와 현직 모델, 광고 모델, 신인 연기

자, 스텐더디스, 아나운서 지망생 등이다. 성매매에 나서는 이 같은 연예인급 여성이 하루에 만나는 고객은 1~2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들을 만나려면 3~4일 전 미리 예약해야 할 정도로 이른바 ‘사장님’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성매매 장소는 서울 강남의 5성급 유명 호텔이다. 성매매가 이뤄지는 호텔을 매일 변경하기 때문에 단속에 걸릴 위험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독성이 높아 일주일에 세 번 방문하는 고객도 있다. 환불을 요구했던 고객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자랑스레 말했다. 특히 이 업체는 고객 취향에 따라 ‘의전서비스’나 ‘당일데이트’ ‘골프투어’ 등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 사회 고위층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예인 성매매의 경우는 호텔을 매일 옮겨다니면서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을 잡기 힘들다. 자세한 정황을 포착하면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성매매업체가 일부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현직 연예인 등의 성매매를 주선하고 있다면서 그 내막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는 성매매에 나서는 여성들의 직업을 나열했으며 익명의 여가수를 거명하기도 했다. 유명 레이싱걸, 피팅모델, 아이돌 연습생, 유명기획사에 소속된 이름이 알려진 여가수, 일명 ‘가로수길 얼짱녀’라 불리며 데뷔를 앞두고 있는 21세 걸그룹 멤버, 현직 모델, 광고모델, 신인연기자, 스텐더디스, 아나운서 지망생 등이다.

그러면서 이들 여성은 하루에 고객 1, 2명만 상대하기 때문에 이들을 만나려면 3, 4일전부터 미리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사장님’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적었다. 또 “이들 성매매업체는 ‘의전서비스’나 ‘당일 데이트’ ‘골프투어’ 등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 사회고위층이 연루돼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기사의 기술만으로는 이같은 내용이 과연 사실인지 신빙성에 의

문을 갖게 한다. 기사는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성 매매업체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 내용을 미확인사실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지면에 옮겨 사회면 머릿기사로 크게 다루었다. 또 그가 말한 ‘유명여가수와 1시간 성매매에 1000만원’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최소한의 검증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제목으로 달았다.

헤럴드경제는 이 보도가 나간 뒤 3일만에 보도내용의 일부를 정정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신문은 이 정정기사에서 위 기사의 『‘일명 ‘가로수길 얼짤녀’라 불리며 데뷔를 앞두고 있는 21세 걸그룹 멤버』라는 언급과 관련, 『연예계서 ‘가로수길 얼짤녀’로 알려진 도희지 씨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헤럴드경제의 이러한 보도 행태는 그 내용이 사실일 경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을 다루면서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보도의 기본 수칙을 확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선정성을 좇아 신문의 윤리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사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②(미확인보도 명시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28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문〉

헤럴드경제 2012년 12월 4일자 1면 「트위터 분석사이트 ‘민심닷컴’ 1주일 언급량 들여다보니 … /진보 놀이터? … 보수 ‘SNS 상륙작전」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래서 중북자 무리들이 싫어요.”

자극적인 표현이다. 더구나 정치인, 또는 이름 모를 일반인이 아닌,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한 여성 연예인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에 남긴 글이기에 그 파장은 컸다.

트위터의 반응은 의외였다. “무개념” 같은 비판이나 욕설만 가득할 것이라는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좌파가 정치발언 하면 ‘개념’이고 우파가 정치발언 하면 ‘논란’이냐?”, 심지어 “혜안이 있다” 같은 글들도 적지 않게 리트윗(RT)됐다.

트위터가 바뀌고 있다. ‘진보= 개념, 보수= 꼴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일단 언급 횟수가 달라졌다. 대선 트위터 분석 사이트인 ‘SNS민심닷컴’ 집계 에 따르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언급량이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박 후보를 언급한 트위터 글은 68만건으로 64만회의 문 후보보다 많았다.

심지어 트위터 정치의 문을 연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가 사퇴한 26일 전후, 트위터는 ‘단일화’나 ‘문재인’이 아닌 ‘박근혜’와 ‘대선’을 말했다. 민심닷컴의 대선 키워드 집계 결과 안 후보 사퇴 이후 부동의 1위였던 ‘단일화’가 사라진 자리에 ‘대선’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또 단일화와 연관 있는 ‘문재인’보다 ‘박근혜’라는 키워드가 더 많이 읽혔다.

이는 트위터의 위력을 정치판에 한껏 과시했던 1년 전 서울시장 선거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당시 선거일이던 26일,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는 하루 동안에만 4만5900여번 이름이 트위터에 오르내렸다.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3만9000여건에 불과했다. 두 사람의 트위터 언급 비율은 공교롭게도 당시 두 후보의 최종 득표율(박원순 53.4%, 나경원 46.2%)과 일치했다.

민심닷컴 관계자는 “진보적 트위터 사용자들이 많이 죽은 감이 있다”며 “반면 보수 트위터 사용자들은 계속 약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표면상 드러나

는 리트윗 횟수, 또 의견 개진 모두 보수성향 이용자들의 활동이 대선을 앞두고 눈에 띄게 늘었음을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의미다.

언급 횟수의 역전은 분위기도 바뀌었다. 포털 ‘다음’이 집계한 지난달 30일 후보별 연관 검색어는 이런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날 하루 동안 대선과 관련한 키워드로 문 후보의 빌라, 상가 매매 논란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다운계약서’가 30% 넘게 나왔다. 또 고가 논란을 빚은 ‘의자’도 5.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반면 박 후보에게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은 ‘청와대’ ‘이명박’ 또는 과거사 논란 등과 관련된 언급은 순위권 내에 들지 못했다. 오히려 ‘박근혜 지지’라는 다소 노골적인 칭찬 키워드가 5.7%의 대선 키워드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런 변화는 SNS(소셜네트워크) 이용자층의 변화와 관련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검색솔루션전문업체 와이즈넷의 최종원 이사는 “소위 보수 쪽 트위터 양이나 블로그 카페 노출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며 “(지난 서울시장 선거 이후) 끈끈함이나 촘촘함 같은 것을 여권에서 많이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40대와 여성에게 점잖고 부드러운 언어로 직접 호소한 새누리당의 ‘대선 SNS 전략’이 조국·김여진 등 ‘멘토단’의 발언을 2030세대가 리트윗하는 민주당의 전술에 거둔 판정승인 셈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트위터에 보수세력이 ‘상륙’함으로써 트위터가 더 이상 진보세력의 ‘놀이터’가 아니라면서 그 근거로 대선 트위터 분석 사이트인 ‘SNS민심닷컴’의 집계 내용을 인용했다. 이 집계는 대선 후보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의 트위터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트위터가 더 이상 진보세력의 ‘놀이터’가 아니라는 근거로 위 기사가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 후보를 언급한 트위터 글은 68만건으로 64만회의 문 후보보다 많았다. 심지어 트위터 정치의 문을 연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가 사

퇴한 26일 전후, 트위터는 ‘단일화’나 ‘문재인’이 아닌 ‘박근혜’와 ‘대선’을 말했다. 민심닷컴의 대선 키워드 집계 결과 안 후보 사퇴 이후 부동의 1위였던 ‘단일화’가 사라진 자리에 ‘대선’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또 단일화와 연관 있는 ‘문재인’보다 ‘박근혜’라는 키워드가 더 많이 읽혔다.』

하지만 트위터에서 키워드 중의 하나인 ‘박근혜’가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곧 관련 내용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이를 두고 더 이상 트위터가 진보세력의 ‘놀이터’가 아니라는 근거라고 못박는 것은 무리다.

기사는 또 끝부분에서 『40대와 여성에게 점잖고 부드러운 언어로 직접 호소한 새누리당의 ‘대선 SNS 전략’이 조국·김여진 등 ‘멘토단’의 발언을 2030세대가 리트윗하는 민주당의 전술에 거둔 판정승인 셈이다.』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트위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언급을 하는 트위터러인들의 동향들을 특정 정당의 전략이나 전술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신문이 어떤 상황이나 사실에 대한 분석 보도를 내보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 기사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기술되어 있다. 더욱이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특정 정파를 두둔한다는 인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이같은 보도는 신문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②(미확인보도 명시 확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29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문〉

東亞日報 2012년 11월 26일자 A14면 「서울 교육감선거 4대1 구도 ‘동상이몽’/좌파 “2010년과 닮은 꼴”/우파 “문용린에 표 몰릴 것”」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재판이나, 이번엔 우파의 승리냐.

다음 달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후보에 우파 진영에서 4명의 후보가 나서자 좌파 진영이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분위기다.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와 교육계 원로 등 우파는 2일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65)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그러나 남승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59)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이상면 전 서울대 법대 교수(66), 최명복 서울시 교육의원(64)도 선거에 뛰어들었다. 우파에서만 4명이 경쟁하는 셈.

일찌감치 좌파 단일후보로 선출된 이수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63)은 속도를 내고 있다.

좌파에서는 이 상황이 2010년 교육감선거의 판박이라고 분석한다. 당시 우파 후보들의 표를 모두 합치면 65%가 넘지만 34.3%의 박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패했다. 좌파 교육감이 좌파 단일후보로 나온 반면 우파에선 후보 6명이 난립한 결과였다. 우파의 분열 속에서도 좌파 전 교육감과 2위 이원희 후보와의 격차는 1.1%에 불과했다. 당시에 출마한 남승희 후보는 11.8%를 얻었다.

이수호 후보 측은 “어제인 2010이라 부를 만하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후보

측 관계자는 “남 후보가 문 후보의 표를 10% 이상 잠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2010년 선거와는 전혀 다를 것이란 주장도 만만치 않다.

2년 전의 선거에선 투표 며칠 전까지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왔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강남 3구’에서 좌파 진영의 꺾 후보가 27~32%의 득표율을 보인 이유도 우파 후보 간의 차이를 잘 몰랐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다.

이번 선거의 경우 후보 인지도가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평가다. 교육부 장관 출신인 문용린 후보와 전교조 위원장 출신 이수호 후보는 색채가 뚜렷하다. 그만큼 유권자에게 분명한 인상을 주기 쉽다는 것.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는 점도 교육감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됐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보수층에 형성됐다. 유력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후보등록(25, 26일)을 마치고 진행될 번호 추첨도 변수다. 교육계 관계자는 “앞 번호가 나오지 않으면 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우파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2012년 12월 19일에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판세를 분석한 내용이다.

기사는 후보자 5명중 4명을 ‘우파’로, 1명을 ‘좌파’로 분류해 호칭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 후보들을 우파, 또는 좌파로 기술하는 이유나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 ‘좌파’ ‘우파’란 법적 용어도 아니며 그 개념은 시대와 장소, 사용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상대적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타당성이나 사회적 합의, 당사자들의 동의나 인정 따위가 없이 특정인을 지목해 이같은 호칭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기사에 언급된 교육감 후보들이 스스로 ‘우파’ ‘좌파’라고 내걸지도 않았거니와 이들 중 누가 이같은 분류 방식을 인정할지도 알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좌파와 우파의 대립으로 인한 동족 상잔의 뼈아픈 역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파’ ‘좌파’라고 분류를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자칫하면 그것이 공연히 배타적인 편가르기와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과 관련한 보도에서 이렇듯 억지로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면, 보편 타당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논의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함으로써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19 신문윤리강령 위반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병 찬

〈주 문〉

전북도민일보 2013년 1월 21일자 1면 「전북 ‘공 들인’ 한국폴리텍대학/”신기술연수센터장에 타지출신 내정설 웬 말”」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전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연수센터장 임명을 앞두고 특정지역 출신 사전 내정설이 번지고 있어 도의회가 정보 탐색에 나서는 등 발끈하고 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대학은 직제가 신설된 신기술연수 센터장을 임명하기 위해 최근 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며, 응모한 1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마친 후 5명으로 압축해 면접심사까지 끝냈다. 대학은 면접 결과를 토

대로 빠르면 다음주나 늦어도 이달 말까지 센터장을 최종 임명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모 단계부터 특정인사의 사전 내정설이 법인은 물론 전북지역에 파다하게 번져 도의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정설에는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구체적인 지역까지 거론되고 있어 전북 내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신기술연수센터는 지난 2006년 노동부의 기술인력개발 혁신센터 건립사업에 한국폴리텍 김제대학이 제안하면서 불씨를 키웠고 전북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전주 유치가 확정됐다.

여러 과정을 거쳐 지난 2010년 6월에 개원했으며, 기계 금형과 전기전자·메카자동화·정보통신 등 5개 분야에 약 250억을 들여 건물을 완성하고 막대한 장비를 보강해왔다. 도의회는 “센터 건축과 초창기 운영 과정에서 전북 출신 인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큰 역할을 해온 상태에서 전북과 무관한 특정지역 출신 내정설이 파다해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며 “요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호 도의회 의장은 “새 정부의 국정지표는 국민 대통합이고, 해당지역 출신을 중용하는 인사 대타당부터 시작된다”며 “전북과 관계없는 특정인사 내정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텍 대학 인사팀의 한 관계자는 “공모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 배수압축 5명 후보의 면접까지 끝났다”며 “사전 내정설은 들어보지 못했고, 절대 내정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한국폴리텍대학이 전주시에 있는 신기술연수센터의 장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특정지역 출신 사전 내정설’이 번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대학 측은 센터장 공모절차를 진행해 14명의 응모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5명으로 압축해 면접심사까지 마쳤으며, 면접결과를 토대로 1월말 이내에 센터장을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전북도민일보는 이와 관련, 공모단계에서부터 특정인사의 사전 내정설이 전북지역에 파다하게 번지고 있고, 이를 도의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러나 도의회가 요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기술로 내정설을 추정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기사는 특히 이 대학 신기술연수센터는 지난 2006년 전북 정치권의 노력으로 전주에 유치된 것으로 전북 출신 인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큰 역할을 해온 점을 강조하면서 『전북과 무관한 특정지역 출신 내정설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선동적인 ‘도의회’의 말을 여과없이 전하고 있다.

이 대학의 신기술연수센터는 신기술 교육연수를 통하여 녹색 및 차세대 신성장동력, 지역전략 산업분야의 직업능력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서 센터장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 기사에 따르면 폴리텍대학 인사팀의 한 관계자는 “공모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 배수 압축 5명 후보의 면접까지 끝났다”며 “사전 내정설은 들어보지 못했고, 절대 내정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북에 있는 대학의 시설이라고 해서 그 시설의 책임자를 전북 출신이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객관성이 없다. 또 기사내용을 종합해보면 ‘특정지역 출신 사전 내정설’은 ‘설’일뿐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런데도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논리의 뒷받침이 없이 자기 지역 출신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논지에 바탕을 두고 기사를 썼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①(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49 신문윤리강령 위반

1. 全羅日報 발행인 유 춘 택

2.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병 찬

〈주 문〉

全羅日報 2013년 1월 31일자 1면 「‘광주 2중대’ 오명 떨쳐낼 절호의 기회」 기사와 제목, 전북도민일보 2월 4일자 1면 「민주 전당대회 인구보정/전북 죽이기 악몽 재현?」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全羅日報, 전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全羅日報)= 『정부 공공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광주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전주완주 통합을 통한 힘 있는 전주 만들기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935년 일제에 의해 강제 분리된 전주와 완주가 무려 78년만에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과 광주, 전남의 공공·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지방행정기관 30개 중 무려 23개가 광주광역시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한국생산성본부 호남지역본부,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광주·호남지원, 대한주택보증(주)광주지점 등 11개 공공기관이 광주광역시에 위치해 있다.

전주에는 이들 기관들의 출장소 내지 지사 등의 형태로 보조기관만이 배치

되어 있을 뿐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역시 광주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과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국세청, 관세청, 기상청, 식약청, 국가보훈처, 공정위, 통계청 등 관련 기관모두가 광주광역시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요 기관으로는 광주고등법원과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교정청,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보훈청, 공정거래위원회광주지방사무소, 호남지방통계청 등이다.

게다가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역시 각각 전남 담양과 순천, 목포에 배치되어 있는 등 호남권 관할 정부 공공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87%가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에 배치되어 있는 셈이다.

도내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립식물검역원 호남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호남지원, 서부지방산림관리청 등 4개 기관만이 익산과 군산, 남원에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이 같은 광주예속화 현상은 얼마 전까지 계속되어 왔다. 지난 2006년 11월 군산해경이 목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산하로 재편됐고 2009년 2월에는 전북통계사무소가 광주통계청으로 흡수 통폐합됐다. 전북통계사무소는 전주사무소로 강등됐고 김제출장소는 폐쇄됐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는 2007년 법원조직 합리화에 밀려 원외 재판부로 격하됐다. 이처럼 공공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광주 편중 현상은 전북의 도세가 점점 약화되면서 비롯된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통폐합은 물론 국가예산 쟁탈전에서도 전북은 항상 광주, 전남 2중대라는 불편한 수식어가 따라 다녔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설움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도세를 키워야 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전주완주 통합을 통한 지역 규모화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와 대전 역시 통합 이후 20년만에 인구가 40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독자적인 경제권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전주완주 통합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통합이 성공할 경우 더 많은 기업들이 전북으로의 이전을 결정할 것

으로 기대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실업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민일보)=『민주통합당의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이 가닥을 잡고 있는 가운데 시·도별 당원 수 차이와 연령별 가중치를 둔 투표가치 보정의 악몽이 되살아날 전망이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와 전당대회 준비위 등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기구 내부에서 지역별 당원수, 연령별 투표가치 보정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혁신위가 지난달 31일 당원 주권 확보를 위해 70~80% 당원의 비중을 두고 당직, 공직후보 선출 뜻을 밝힌 만큼 당원의 투표가치 보정 문제는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전북을 비롯 광주·전남 등 호남 정치권은 정당정치 붕괴와 당원주권 원칙을 들어 당원의 투표가치 보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춘석 도당위원장은 18대 대선결과를 언급하며 “투표가치 보정은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준 호남에 상을 주는 대신 벌을 주는 격”이라며 “당원이 많다고 당원의 권한을 차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일”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2012년 1.15 전당대회 당시 지역별 당원수에 따른 투표가치 보정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전북을 비롯 광주·전남등 시·도당 차원의 성명서 발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당원의 지역별, 연령별 투표가치 보정이 결과적으로 헌법의 ‘1인 1표’ 원칙에 위배되고 당대표 경선에서 호남 정치권을 죽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당개혁특위(당시 천정배위원장)는 지난 2012년 1.15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 정치혁신위처럼 당원주권 실현을 위해 당원에 절대적 비중을 둔 전당원 경선제안을 내놓았다. 천 위원장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별 당원수 불균형 문제를 이유로 투표가치 보정을 뒤 일반당원의 경우 경남, 대구지역 당원 1표가 전북 당원 16표, 전북의 권리당원 1명이 대구의 160분의 1에 불과한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했다.

도 정치권은 당시 “당을 위해 당비를 납부하고 민주당의 버팀목 역할을 한 호남 당원을 오히려 무시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이외에도 도 정치권은 전북이 5060세대의 장년층이 많다는 점을 들어 연령별 가중치 도입에도 반대하고 있다.』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全羅日報의 위 기사는 최근 해당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의 필요성과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를 다루고 있다. 기사는 호남권에 있는 공공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30개 가운데 23개가 광주광역시에 편중돼 있는 반면 전북 전주에는 이들 기관의 출장소 내지 지사 등 보조기관만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이를 ‘광주예속화 현상’으로 지적하고 있다. 기사는 특히 광주편중 현상은 전북의 도세가 점점 악화되면서 비롯된 결과물이라고 전제하고, 『전북은 항상 광주, 전남 2중대라는 불편한 수식어가 따라 다녔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행정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몰려있는 것만으로 그 주변 지역을 ‘예속화 현상’, ‘편중현상’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또 ‘2중대’라는 표현은 특정세력의 한통속, 혹은 들러리라는 부정적인 의미이며, 대부분 정치권에서 선동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광주 2중대’라는 표현 역시 근거가 부족한 정치적인 수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1면 머리기사에 「‘광주 2중대’ …」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단 것은 공연히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전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민주통합당의 차기 당대표 선출방식 가운데 인구보정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인구보정은 지역별 당원수와 연령에 가중치를 두고 투표가치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 인구보정으로 201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포 경남, 대구지역 당원 1표가 전북 당원 16표에 해당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정치권은 당원의 지역별, 연령별 투표가치 보정이 결과적으로 헌법의 ‘1인1표’ 원칙에 위배되고 당대표 경선에서 호남 정치권을 죽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의 인구보정은 논란이 있으나 전국정당을 지향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때문에 기사에서처럼 『호남 정치권을 죽이는 결과를 낳거나』 『호남 당원을 무시한 것』으로 보기엔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기사 작성시점에서 민주당 당대표 경선 방식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민주통합당 당내 문제를 호남 정치권 전체로 해석한 시각도 무리가 따른다.

편집자는 더 나아가 큰 제목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인구보정이 「전북 죽이기 악몽 재현?」으로 달았다. 이는 본문에도 없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지역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차별과 편견의 금지

▲ 2012-1057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2012년 4월 9일자 9면 「“소개받은 직장 체임”/조선족이 (직업소개소)소장 살해/‘수원 엽기살인 이어/조선족 흉악범죄 문제화」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족에 의한 수원 20대 여성 엽기적 살해 사건 및 경찰의 부실 수사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조선족이 월급 체불 등에 원한을 갖고 직업소개소 소장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족에 의한 참혹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 거류 중인 외국인 등의 흉악 범죄를 포함한 강력 범죄에 대해 시민사회의 불안감이 확대되며 이에 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소개받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며 직업소개소 소장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살인)로 조선족 출신 이모(38)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소장 김모(70)씨를 소지하고 있던 칼로 수차례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격을 당한 김씨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 날 새벽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국내에 입국한 뒤 김씨의 직업소개소에서 직장을 소개받았으나 해당 직장에서 2개월간 230만원의 월급 중 130만원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이씨를 검거하기 위해 바로 출동했지만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했다”며 “현재 이씨가 집이나 직장 등 관내엔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강력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조선족이나 외국인들의 입국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정(범죄심리학) 경기대 교수는 “이러한 잔혹 범죄가 조선족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출입국 심사가 허술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안 돼 또다시 조선족에 의한 살인사건이 일어나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등의 흉악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여론을 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잔혹 범죄가 조선족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다만 “국내 출입국 심사가 허술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들에 대한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이 교수 한 사람의 의견을, 그것도 이 교수의 발언을 일반화하고 나아가 발언 수위를 한층 더 부풀려 <조선족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제목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조선족 흉악범죄 문제화>라고 달았다.

우연히 조선족에 의한 살인사건 두 건이 잇따라 일어났다고 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 전체를 잠재적 흉악범죄자로 보고 사회문제시하는 것은 과장보도라고 볼 수 있으며 더욱이 미약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된 이 기사는 인종 차별을 조장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73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 문〉

스포츠조선 2012년 10월 8일자 1면 「프로야구 일본인 코치들 짐싸라」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012시즌 프로야구 개막 당시 일본인 등록 코치는 모두 10명이었다. 삼성과 KIA가 각각 3명, 두산과 한화가 2명씩 일본인 코치를 영입해 시즌을 시작

했다. 여기에 정식 코치로 임명하지는 않았지만, 롯데는 스프링캠프서 지바 롯데 투수코치 출신의 소노카와 가쓰미를 투수 인스트럭터로 기용했었다. 올시즌 특징중 하나는 트레이닝 파트에서 일본인 코치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됐다는 점이다. 삼성의 고야마, KIA의 미나미타니, 한화의 하나마쓰 코치가 트레이닝 파트를 담당했다. 롯데 역시 시범경기 때까지 가쓰자키 트레이닝 코치와 함께 했다. 말그대로 일본 코치 전성시대다. 그 어느해보다도 많은 일본인 코치들이 국내 야구를 주름잡았다.

▶ 서른살 넘은 한국야구, 코치까지 수입해야 하나

두산은 사상 처음으로 일본 프로야구 감독 출신 인사를 수석코치로 영입해 화제를 낳았다. 두산 이토 수석코치는 지난 2004년 세이부 감독을 맡아 재팬 시리즈 우승을 이끈 일본 야구 명장 출신이다. 국내 프로야구 최초의 일본인 지도자는 지난 80년대 초반 롯데 코치와 감독대행을 맡았던 도이 쇼스케였다. 당시 그의 한국 이름은 도위창이었다. 85년 OB도 내야수 출신의 사노 요시유키를 수석코치로 임명한 바 있다. 이후 명맥이 끊겼던 일본인 코치 세력은 지난 98년 외국인선수 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화됐다.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경기 운영의 선진화라는 명목하에 일본인 코치들을 대거 영입했다. 일본 프로야구와 인연이 깊은 김성근 선동열, 조범현 감독 등이 각각 SK와 삼성, KIA 지휘봉을 잡고 있을 때 일본인 코치들의 비중이 커졌다. 그때부터 시작된 바람이 올시즌 정점을 찍었다.

한국 프로야구는 31시즌째를 막 끝냈다. 경험도 노하우도 없던 프로 초창기라면 모를까, 서른살 넘은 청장년이라면 코치 인력 정도는 자급자족해야 정상이다.

▶ 몸값은 두 세배, 효과도 두 세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일본인 코치들, 과연 필요한 것일까. 올시즌 현상만 보더라도 ‘무분별한 영입’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구단의 기대대로, 감독이 원했던 바를 이들 일본인 코치들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게 수행

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감히 끄덕이기 힘들다.

우선 이들의 몸값부터 보자. 국내 코치들의 2~3배에 이른다. 한국야구위원회(KBO) 등록 자료에 따르면 올시즌 일본인 코치 10명의 평균 연봉은 1220만엔이다.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면 1억7300만원이다. 삼성 오치아이 코치가 1800만엔(약 2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올시즌 국내 코치들의 평균 연봉은 8000만원이 채 안된다. 1~2년차 국내 코치들은 5000만원 안팎의 연봉을 받고 일을 한다. 수석코치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 일본인 코치들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 분명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국내 구단들이 이들을 향해 처음부터 ‘저자세’를 보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된다. 이에 대해 일본인 코치를 쓰는 모 구단은 “일본내에서의 지명도를 고려해야 하고, 일본 현지 물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국내 코치들보다 많은 연봉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인 코치 1명의 연봉으로 2~3명의 국내 코치를 쓰거나 키울 수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없다.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다. 많은 일본인 코치들은 팀에 합류하자마자 선수들의 얼굴과 등번호부터 외운다. 코치들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달 간의 마무리캠프 기간 동안 선수들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다. 투수, 타격, 배터리, 트레이닝 등 파트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개별 선수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파악에 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듣는 코치들이 많다. 일부 일본인 코치들은 국내 야구 수준을 우습게 봤는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선수들과의 의사소통에마저 소극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온 게 사실이다.

프로야구에서 코치라는 자리는 선수와 직통해야 한다. 야구 기술 전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선수들과의 긴밀한 스킨십이다. 선수들은 코치로부터 야구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다. 때론 감독에게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고충을 허물 없이 털어놓고, 개인적인 상담까지 할 수 있는 형같은 역할을 기대한다.

▶ 야구인들 민심도 보듬어라

국내 야구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 현역 은퇴후

프로 구단 코치로 들어가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신인드래프트에서 10라운드 이내에 지명을 받아야 하는 아마추어 선수들의 진로 문제와 다를 바 없다. 지난 시즌 후 재계약에 실패한 수도권 구단 출신의 모 코치는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각 팀마다 평균 1~2명의 외국인 코치나 인스트럭터를 쓰고 있는데 그들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국내 코치들의 처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올해 KBO에 등록된 9개 구단 코치(감독 제외)는 모두 168명. 이 가운데 10자리를 일본인 코치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일단 정규시즌이 마무리된 직후 KIA는 다카하시 투수코치, 마츠야마 수비코치, 미나미타니 트레이닝코치 등 3명의 일본인 코치들과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화 역시 새 사령탑을 영입한 뒤 후쿠후라 수비코치와 하나마쓰 트레이닝 코치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삼성과 두산의 일본인 코치들도 포스트시즌 종료후 잔류 여부가 결정된다. 삼성 오치아이 투수코치의 경우 이번 한국시리즈를 끝으로 일본으로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인 코치들의 능력 자체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비용 대비 효과와, 서른살을 넘긴 한국야구의 자립도, 그로 인해 야구인들이 겪어야 하는 심리적 그늘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을 한번쯤 짚어보자는 뜻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올해 국내 야구계에 어느 때보다 많은 일본인 코치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해 문제점이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짚었다. 일본인 코치들의 몸값이 비싸 국내 코치의 2~3배에 달하는 연봉을 주고 있으며, 이들 때문에 국내 야구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들은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그 중엔 선수들과의 스킨십이 부족한 이들도 많다는 것이다.

기사는 그러나 프로구단들이 피를 말리는 프로야구 경쟁 무대에서 이기기 위해 일본인 코치들의 능력을 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간과했다. 또 연봉액은 화폐가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따지고 교섭대상 일본코치와 협상

을 벌인 끝에 자유계약을 맺은 결과다. 따라서 그들의 연봉수준이 높다고 비판할 일이 아니다.

일본인 코치들 때문에 국내 야구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적절하지 않다. 국내 야구인들 중 능력이 뛰어난 코치감들이 많다면 프로구단이 굳이 비싼 값을 치르면서 일본인 코치를 데려올 이유가 없다. 단지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또 외국코치라도 우리말을 빨리 익히면 좋은 일이긴 하나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우리나라 코치나 선수들 역시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지만 언어가 잘 통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일본인 코치들이 스킨십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관련한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다. 보도기사는 사실기사든 의견기사든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한다.

위 기사는 또 사실과 같은 의견기사가 아니라 기획성 스트레이트 기사인데 기사내용 중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제목을 꾸미지 않고 기사내용에도 없는 ‘프로야구 일본인 코치들 짐싸라’라는 강한 촉구성 주장을 제목으로 달았다.

일본인 코치들은 국내 프로구단들과의 자유계약에 따라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불법행위를 했다거나 윤리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짓을 하지 않은 이상 근거도 없이 그들에게 ‘떠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차별과 편견의 결과며, 국수주의의 발로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이 기사의 문패인 ‘맞아죽을 각오로 쓴다’는 표현은 선정적이다.

따라서 이 기사는 언론매체가 갖추어야 할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을 외면하고 보도기사가 갖추어야 할 객관성과 공정성, 정확성을 모두 결여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